

文 대통령, 손정의 접견... “벤처창업 투자 역할 커”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韓日 빙하기 ‘문-손 만남’ 시선집중 “벤처붐,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 손 회장, 기업 총수들과 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은 현재 한일관계가 빙하기를 맞이한 시점과 맞물려 정계·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은 한일 관계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형국이다. 일본 정부가 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제재’를 단행했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과 손 회장

만남 관련 “(손 회장은) 벤처창업 투자 자로서의 역할이 크신 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AI(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벤처붐은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혁신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금 현황

들을 보면 신설 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만난 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세계적인 혁신기업가로 정평이 났다.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 IT기업이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우버(차량공유기업)의 최대 투자자다. 소프트뱅크는 우리기업인 쿠팡에도 약 30억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손 회장과 만나 “제가 2012년에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서 대담을 나눈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서 손 회장을 만나 몽골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협력 발전 등에

너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났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개별만담을 가진 글로벌 기업인 손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잭 도시 ‘트위터(짧은 글로 다수와 소통하는 SNS)’ 최고경영자와 환담을 가졌다. 당시 만남은 도시 CEO가 지난 1월 말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업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모든분야 퇴보” vs “국회파행 사과먼저”

(나경원)

(여야 4당)

한국당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일하는 국회 답 듣고 싶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없는 회귀 선언에 불과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 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형 포용국가로 가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본인의 연설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일하는 국회에 대해 주문했고, 오늘 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대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을 마저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총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때로는 근거도 없고,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서 우월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는 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긴 세월 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남의 탓이라면 한

국당은 반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불안과 공포를 논하기 전 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당이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한 만큼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관계 재정립과 국가의 일방적 경제 주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 말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졌다”면서도 “잘못을 퇴행적인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을 뿐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소회했다. 박수석 대변인은 이어 “1%의 최상위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 대안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설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선 정호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피해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폭탄’에 불과했다”며 “한국당이 얼마나 답이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정대변인은 또 “패스트 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마비된 국회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리고자 했던 여야 4당의 교육 지책이었다”며 “자신들의 야만스러운 폭거를 아직도 의거인 양 포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新)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외교·민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SOC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올려야”

일자리·경제활력 SOC투자 토론회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를 자의 해석해 투자 접근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SOC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SOC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SOC 투자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SOC 투자 현황을 제시하며 ▲인프라(생활시설) 안정성 및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효적 SOC 자본 스톱(재화)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

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방향성 재검토 ▲인구·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정책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470조5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일하게 SOC 부문 예산을 축소했다.

실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18억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석대성 기자

모호한 ‘쇼핑몰 사업자’ 정의 바로잡는다

전재수 의원, 관련법 개편안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쇼핑몰 사업자의 정의와 합당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만 묶어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 판매 중개뿐 아니라 직접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책임을 지게 하고, 단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를 고지하게 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골자다. 쇼핑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중 핵심 내용만 가져왔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전 의원실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했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 현 전자상거래 상황을 전

혀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개정 관련 이견이 없는 주요 내용만 뽑아 우선 입법한다는 게 전 의원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사업자가 청약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 정보·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석대성 기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 임명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

서관과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유민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로 정구철 중소 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후임으로 강정수 미디어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정상임감사는 1963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

서관과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임명된 강대표는 1971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독문학과 학사 및 독일 비텐-헤어데케대학교 경제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및 미디어티(미디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자) 대표를 지냈다.

한편 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다



정구철 靑 홍보기획비서관

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정책실 부사장을 지낸 정 전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관련 업종으로 복귀할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우승준 기자